

더불어민주당 대한민국 대전환 제20대 대통령선거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

- 이재명의 ‘합시다. 소확행’ 공약 시리즈 71 -
“부과 기준 현실화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상향’ 공약 발표

- ‘부동산 가격 상승’ 탓 부담 커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공제액 현실화 필요성 증가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7천만 원으로 상향, 추후 1억 원까지 상향 공약…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 기대

더불어민주당

나를 위해, 이재명 소확행 공약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재산공제액 임기 내 1억까지 확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71번째 소확행 공약으로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 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담 완화 공약을 발표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등 현실 상황 반영을 통한 제도 개선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보다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건강보험료는 직장에 다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반면, 자영업·소상공인 같은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에도 집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도 부과 대상이 돼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는 2017년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를 위한 단계적 개편안을 발표해 2018년 7월부터 1단계를 시행해 왔고, 올해 7월부터는 『재산공제 5천만 원(시가 약 1억 원)』이 포함된 2단계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2017년에 발표된 『재산공제 5천만 원』은 2016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으로, 지난 5년간의 부동산 가격 상승 상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해 당초 취지에 맞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겠다”고 강조하며 관련 공약을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을 7천만 원 기준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7천만 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것으로, 2020년 기준 지역가입자 재산보유 하위 60% 기준 수치이다. 민주당 선대위가 조사한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평균공시가격」 발표 내용을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21년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43.2%가 상승했고, 서울의 경우 72.0%나 상승했다. 이러한 부동산 가격 상승분을 포함하도록 해 현실성부터 높이겠다는 취지다.

건강보험료 재산공제액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전체 528만 세대 중 513만 세대의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2만 원 인하되며, 이 중 236만 세대는 전액 공제될 예정이다. 제도 및 관련 기준의 현실화로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 선대위의 설명이다.

또한, 이 후보는 더 많은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기 내 재산공제액 기준을 1억 원으로 높이겠다고 공약했다.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취지에 맞게 재산공제 기준을 더욱 상향해가겠다는 취지다. 재산공제액이 1억 원 까지 상향될 경우, 517만 세대의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8만 원 인하되고, 이 중 238만 세대가 전액 공제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부동산 가격 상승 부작용이 국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으로 제대로 고치겠다”며 관련 제도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 (끝)

※문의 : 정책본부 02-786-2741

참고자료

□ 건강보험료 재산공제 관련 주요내용 <17.03.30 발표>

- 재산보험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재산에 부과하는 경우에도 공제제도를 도입, 공제금액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 1단계(18년 7월)는 세대 구성원의 총 재산 과표 구간에 따라, 500만 원에서 1,200만 원까지를 공제*하게 되어 349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58%)의 재산보험료 △40% 감소
- 2단계(22년 7월)는 하위 60% 재산인 과표 5,000만 원을 공제하여 시가 1억 원 이하의 재산에는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582만 세대(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의 97%)의 재산보험료 △41% 감소

구분		1단계	2단계
공제금액 * 과표 기준		500~1,200만 원 (지역가입자 중위재산)	5,000만 원 (유재산 하위 60% 재산)
재산보험료 면제	자가 소유	1,200만 원 이하 (시가 2,400만 원 이하)	5,000만 원 이하 (시가 1억 원 이하)
	전월세	4,000만 원 이하	1억 6,700만 원 이하
재산 보험료 인하세대		349만 세대	582만 세대

* 전월세 재산환산 방식(개편) : (전세보증금 × 30%) - 공제금액

※ 2단계에서 재산공제금액을 5천만 원 보다 더 확대할 것인지 여부는 소득 파악 개선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추가로 논의할 계획

□ 문제

- 22년 7월부터 실시될 5천만 원 일괄 재산공제액 기준은 2017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 발표 당시에 정해놓은 기준(2016년 기준)으로 그 당시 대비 주택가격 및 전월세 가격이 상당히 증가함.
 - 한국부동산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매매의 경우 주택 유형에 따라 2017년 1월 대비 2021년 7월 기준 45%~74% 인상. 전세의 경우도 47~51% 인상.

구분	평균매매가격(천원)			평균전세가격(천원)		
	2017년 01월	2021년 07월	변동률	2017년 01월	2021년 07월	변동률
단독	222,500	344,759	+55%	110,345	162,110	+47%
아파트	283,255	491,728	+74%	205,654	308,699	+50%
연립다세대	139,828	202,140	+45%	91,283	137,918	+51%
종합	248,457	411,499	+66%	165,170	248,136	+50%

- 국토부가 발표한 공동주택 전국 평균공시가격 또한 2017년 대비 2021년 43.2% 인상 되었음.

[최근 5년간 시·도별 공동주택 평균가격 현황] (단위: 천원)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17년	176,887	306,079	161,739	164,768	139,971	126,298	133,188	160,369	172,575
18년	186,736	337,130	169,909	172,924	147,776	131,326	138,177	157,122	201,943
19년	197,638	384,285	162,436	186,368	149,719	145,537	144,870	142,494	220,072
20년	211,227	439,587	166,427	188,529	153,248	150,068	165,729	142,877	238,480
21년	253,279	526,215	202,885	215,198	177,609	158,886	201,459	170,910	408,839
21년/17년	+43.2%	+71.9%	+25.4%	+30.6%	+26.9%	+25.8%	+51.3%	+6.6%	+136.9%
구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7년	185,095	89,324	98,133	101,067	90,338	81,035	92,396	126,887	141,124
18년	193,145	94,517	96,662	101,991	93,482	86,425	91,450	123,963	152,141
19년	204,185	92,457	93,862	99,814	94,431	91,907	88,230	114,499	150,703
20년	213,053	90,283	92,536	100,288	94,215	94,933	86,862	114,994	148,887
21년	266,619	97,279	108,573	110,842	105,524	102,428	94,489	127,751	153,038
21년/17년	+44.0%	+8.9%	+10.6%	+9.7%	+16.8%	+26.4%	+2.3%	+0.7%	+8.4%

□ 대책

- 2단계 재산공제액을 기존 5천만 원에서 최소 40%가 상향조정된 최소 7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 건강보험 재산보험료 공제 현실화 방안

- 최근 부동산값 상승,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7월부터 7천만 원, 임기 내 최대 1억 원” 까지 공제 확대 검토

[재산공제 금액별 재정증감보험료 인하세대 및 평균 인하보험료 현황] (21.7월 기준)

공제액	기준	재정소요 (5천만원 공제 대비)	인하 대상자 및 월평균보험료 인하액 (재산보험료 전액공제 세대수)	의의
5천만원 공제 (22.7월)	16년 기준 재산보유하위 60%	1조4,658억	인하자 507만 세대 월평균보험료 3.7만원인하 (213만 세대)	최근 급격한 재산상승 미반영에 따른 수용성 저하 문제
6천만원 공제	20년 기준 재산보유하위 57%	1조6,783억 (+2,125억)	인하자 510만 세대 월평균보험료 3.9만원인하 (235만 세대)	재산상승 50% 반영 (수용성↑)
7천만원 공제	20년 기준 재산보유하위 60%	1조8,650억 (+3,992억)	인하자 513만 세대 월평균보험료 4.2만원인하 (236만 세대)	재산상승 100% 반영 (수용성↑)
1억원 공제	20년 기준 재산보유하위 70%	2조3,193억 (+8,535억)	인하자 517만 세대 월평균보험료 4.8만원인하 (238만 세대)	재산상승 반영(수용성↑) + 추가부담 완화(형평성↑)

Q & A

□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공제를 해주는 것인가요?

- ☞ 아닙니다. 현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산세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최대 1,350만 원을 공제해주고 있는데, 올해 7월부터 2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가 실시되면서 재산세에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5천만 원(시가 약1억원)을 공제될 예정입니다.
- ☞ 그러나 이 “재산공제액 5천만 원”은 2016년 지역가입자 중 재산을 보유한 하위 60%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2020년 동일기준으로 보면 “약 7천만 원” 정도에 해당합니다.
- ☞ 이재명 후보는 건강보험료의 재산공제액이 그동안 상승한 부동산 가격이 반영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임기 내 1억 원(시가 약2억 원)까지 올려 집 한 채 가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 재산공제액을 예정된 5천만 원에서 추가로 더 올리면 건강보험 재정이 얼마나 더 소요되나요?

- ☞ 현재 재산공제액을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약 3,992억 원이 추가 소요되고, 1억 원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약 8,535억 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 ☞ 다만 재산공제액이 7천만 원으로 상향될 경우, 재산보험료가 납부되는 전체 528만 세대 중 513만 세대의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2만 원 인하되며, 이중 236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전액 공제되어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재산공제액이 1억 원까지 상향될 경우, 517만 세대의 재산 관련 건강보험료가 월평균 4.8만 원 인하되며, 이중 238만 세대는 재산보험료가 전액 공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지난 12월 이재명 후보가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는 제안을 내셨는데, 이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 ☞ 이재명 후보는 작년 12월 부동산 가격이 예상외로 많이 폭등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급격히 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 ☞ 이번 재산공제액 상향조정 공약은 건강보험료 인상과 달리 지난 5년간 부동산 가격 인상이 미반영된 재산공제액을 현실화시키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와 별개로 추진되는 사안이지만, 결론적으로 건강보험료에 부담을 갖게 계신 많은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재산공제액을 올리는 만큼 건보재정은 계속 악화되는데, 이에 대한 재정확충 계획이 있습니까?

- ☞ 현행 건강보험법에 따라 정부는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일반회계 14% + 증진기금 6%〈담배부담금 수입의 65% 상한〉)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그러나 그동안 보험료율은 매년 인상하며 국민의 부담은 가중시키면서 정부지원은 법정비율을 매년 지키고 있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2022년도의 경우도 정부지원율은 14.4%에 불과합니다.
- ☞ 건강보험 재정확충을 위한 여러 방법들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액이 현행 법령에 따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단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뿐 아니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적극적인 코로나 대응지원 등을 실시해 나겠습니다.

참고

2022년 건강보험 국고지원 및 연도별 건보료 인상률 · 정부지원을 현황

- * 2022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72조 7,540억 원
- * 2022년도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예산:
일반회계 8조 6,843억 원(11.9%) + 건강증진기금 1조 8,149억 원(2.5%)
- * 건강보험료율(인상률) : '18년 6.24%(2.04%) → '19년 6.46%(3.49%) →
'20년 6.67%(3.20%) → '21년 6.86%(2.89%) → '22년 6.99%(1.89%)
- * 정부지원율(지원액) : '18년 13.5%(7.2조 원) → '19년 13.6%(7.8조 원) →
'20년 14.0%(9.0조 원) → '21년 14.3%(9.5조 원) → '22년 14.4%(10.5조 원)